

지속 가능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전북자치도, 1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창업 지원·투자 활성화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사진)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업기업 성장 지원, 도·외·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예비·초기·도약)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 도약패키지를 통해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투자 유



치, 마케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창업기업 특례보증과 금융 지원을 제공,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 2개사에 불과했던 도내 TIPS 선정 기업이 2024년 기준 22개사로 급증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방산, 기후테크 등 지역특화산업 중심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딥테크(Deep Tech)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외·해외의 스타트업과 우수 인력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 전북 헬린지사업'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유치한다.

또한, 전북은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지역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와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법인

설립 및 비자 취득을 돕는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북 혁신 성공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현재까지 22개 펀드, 8,183억 원이 결성됐으며, 올해 추가로 2,640억 원을 마련해 총 1조 823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전북 벤처펀드는 전기·기계·바이오·ICT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이 1,876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기업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환경에서 벗어나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인천시장 개헌안 발표에 반대한다”

김관영 지사 “시도지사협 명의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를 전 유정복 시장과 통화했지만, 당시 개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초안을 확인한 후 “헌법 제84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임

기 단축 등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시장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내 이름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원전 신설·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들의 의견수렴 의무화

민주 윤준병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원전 신설 및 원전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정유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와 함께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시설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 함으로써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 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국민연금, 공공데이터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행정안전부(장관 작무대행 고기동)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 체계 등 3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매년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결과, 품질 평가에서 45점 만점 중 43.37점을 기록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117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75,508건의 파일 데이터 중 조회수 2위를 기록하며 활용도가 높다.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휴·폐업 사업장 지원 정책, 기업 신용평가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돼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다산기공 완제품 총기들을 살펴보는 김관영 도지사 4일 원주 다산기공(주)에서 열린 도내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위산업체인 다산기공의 완제품 총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도, 독일 잘란트주와 글로벌 바이오 협력 강화

독일 잘란트주 경제부총리

잘란트경제진흥공사 전북 방문

도내 바이오 기업과 간담회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에서 독일 잘란트주 부총리(경제·혁신·디지털·에너지 장관) 및 잘란트경제진흥공사 대표단을 맞이하고, 전북 지역의 바이오·수소·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방문해 방사선의약품 개발 현황을 듣고, 전북의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새만금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를 방문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과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독일 잘란트주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자동차, 철강, 세라믹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잘란트주에 위치한 KIST유럽연구소 내에 전북 글로벌BIO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 양 지역 간 공동 연구 및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잘란트경제진흥공사(gwSaar)는 잘란트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컨설팅, 산업부지 개발, 보조금 신청, 허가 절차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북의 바이오, 수소, 에너지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를 얻고 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9월 잘란트경제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지역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 투자 유치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바이오 기업들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독일 잘란트주와 미국 보스턴에 글로벌 거점 확보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도내 바이오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3월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예방활동 △화재위험대비 △화재대비대응의 3대 전략과 △주거안전강화 △과난약자 보호 △화재위험제거 △가정화탈 안전 △교육홍보강화 △대응태세확립 △지역맞춤특수수색의 7개 중점 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주거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소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물품을 보급한다.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1만㎡ 이상), 학교 기숙사, 축사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도민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SNS와 언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마을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을 담당제'를 운영하고, 화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 방송 수신기를 활용한 화재 예방 홍보 방송을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의 전말과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전쟁 유도 북풍 공작 전말·해법 모색

민주 정동영 의원, 토론회 개최... “신속 진상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정주병)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의 전말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준형(조국혁신당 비례), 정혜경(진보당 비례) 국회의원, 자주통일평화연대, 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이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서해 NLL 충돌 유도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밝혀진 '북풍 공작' 의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목받았다. /김익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해빙기 대비 수변도시 현장 긴급 안전점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 나경균 사장은 4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시공중인 교량 2개소의 위험요인 점검 △토사의 동결·융해에 따른 절·성토부 지반상태 등을 집중 점

검했으며, 아울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모에 위험신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만호 기자